

이민자와 함께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

윤인진 | 한국이민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예정된 미래’와 ‘미지의 미래’의 갈림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는 ‘이주의 시대’라고 불린다. 인류 역사에서 이주는 항상 일어났지만, 현시대의 이주는 그 규모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 세계의 이민자는 2020년에 2억 8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이민자 중에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서 이민자가 모국과 거주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들의 인구 비율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주는 개인에게는 정착의 과정이고 사회에는 전환의 과정이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Stadtluft macht frei)”는 독일의 속담처럼 이주는 개인의 생애를 이주 이전과 이주 이후로 구분한다. 도시의 자유를 체험한 사람은 농촌의 전통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이주민은 타지에

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시물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고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보편성을 발견하여 코스모폴리탄(세계주의자)이 되기 쉽다.

또한 이주는 사회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의 동력이다. 이주가 제국의 흥망성쇠에 중요한 촉발제로 작용했던 사례는 세계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예로,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열고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한 스페인은 이교도에 대한 종교 탄압으로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추방했고, 이들은 네덜란드와 영국 등지로 이주했다. 이들을 추방한 스페인은 상공업의 몰락을 지켜봤고, 이들을 수용한 네덜란드와 영국은 새로운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람의 이동, 특히 ‘안트리프리너’라고 불리는 상공인, 기술자, 기업가의 이동은 지식·기술·자본·무역망의 이동을

수반하며, 이들을 잃은 국가는 쇠망했고 이들을 수용한 국가는 혁신과 발전을 거듭했다. 국민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종교, 인종, 국적의 다양성에 비관용적인 국가는 인재를 잃었고, 실용주의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윤인진, 2021).

세계 4대 강국의 틈에서 늘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현재 대한민국은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결국은 쇠약하는 길로 가는 '예정된 미래'와 생소하고 위험하지만 기회의 땅으로 가는 '미지의 미래'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다문화 지체, 이민 딜레마, 정책 격차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사회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민자와 소수민족의 사회권과 문화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 간의 지체를 '다문화 지체'라고 부를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은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이 인식과 관습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로 인해 사회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불렀다. 이 개념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한국 사회가 다민족화, 다문화화되었지

만 한국인의 인식과 사회 체제가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현상을 '다문화 지체'라고 볼 수 있다(윤인진, 2019).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관습 간의 불일치는 이민 딜레마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민 딜레마는 이민이 인구 감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해결책이지만 이민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인해 쉽게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한국이 당면한 심각한 미래 위협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한국 정부는 이민자를 한국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한다. 이민과 다문화 사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이민과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양분되어 있다. 단일 민족 국가로 남을 것인지, 이민 국가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국론이 분열되어 정부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장애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는 과거의 출입국 관리에서 외국 인력 활용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목표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을 이민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이 이민자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정부 정책은 내국인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에게 선심을 쓴다는 비판

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이 일반 대중의 보수적인 반이민 정서와 충돌하는 상황을 ‘정책 격차’라고 부를 수 있다. 아직 일반 국민의 반수 이상이 한국이 이민 국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민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외국인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외국인 정책이라고 쓰고 이민 정책이라고 읽는다고 할 정도로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미래를 선도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된 미래’를 열어 가는 이민 정책

과거 한국은 근대화의 후발 주자로서 선진국의 발전 모델을 모방하는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이제는 따라갈 선진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거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서구 국가들이 얼마나 의료 체계가 허술하고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부실하며 국민이 분열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은 경제, 과학기술, 의료, 그리고 한류로 불리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이민 정책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도 혁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선도적인 이민 정책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 유용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민 정책은 국경 관리, 외국 인력 유치와 활

용, 이민자 사회통합과 같은 중요한 과제들을 포함한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외 인적 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실용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유학생, 전문기술자, 사업가와 같은 인재가 한국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문화 다양성 존중과 같은 윤리적인 목표를 실용적인 목표와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은 여론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이치로 정부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외국인과 이민자가 살기 편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국민도 행복한 선진 한국을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민 정책의 비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 이민 정책의 목표는 ‘선진국으로서 미래 경쟁력과 국격을 높이는 이민 정책’으로 삼으면 좋겠다.

인구 감소와 국력 쇠약이 예정된 미래, 예기치 않은 위험이 도사린 미지의 미래를 넘어서 우리는 준비된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 머지않아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문화 다양성 교육을 확대하며, 이민청과 같은 전담 기구

를 설립하는 등 다문화 사회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의 성장 단계에서는 정주형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민자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기여를 촉진하는 다문화 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성숙 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문화 다양성이 균형 있게 조화되는 다문화 사회의 공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윤인진. (2019). The Rise and Fall of Multicultural Discourse and Policy in South Korea. *다문화와 인간*, 8(1), 1-30.
- 윤인진. (2021). 디아스포라와 제국의 흥망성쇠. 호모 쿨투랄리스(한양대 평화연구소), 1월 30일.